

위기의 오리산업 돌파구는

방역당국과 오리농가는 적이 아닌 파트너
현장의 목소리 적극 수용 자세 필요

한국오리협회 광주전남도지회

전영옥 지회장

깔짚 재사용 가능, 농가 비용절감

HPAI로 인해 예방적 살처분 오리농가들이 재입식할 경우 발효가 된 농장 내 깔짚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조치가 지난 4월 시행됐다.

발생농장이 아닌 예방적 살처분 농가의 재입식 조건으로 농장 내 깔짚을 외부로 반출해야만 했지만, 오리업계에서는 정밀조사를 거쳐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으면 깔짚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농가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리농장 분뇨 발효처리 방법 알림’을 통해 보호구역과 예찰 지역 내 예방적 살처분 농가는 고병원조류인플루엔자 음성 판정을 받으면 재입식 발효된 깔짚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로 인해 오리농가 입장에서는 농가당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기까지는 쉽지 않은 여정을 거쳐왔다.

오리협회 광주전남도지회 전영욱 지회장은 “오리농장 특성상 깔짚을 미생물과 함께 충분히 발효시켜 재사용해 왔다. 만에 하나 예방적 살처분 당시 깔짚에 바이러스 위험성이 있었다면 살처분과 함께 처리했어야 했다. 그런데 재입식 조건으로 이제 와서 분변을 반출하라는 것은 현장과 전혀 동떨어진 대책이었다”라며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건의함에 따라 농가들의 요구가 합당하다고 판단돼 깔짚 정밀조사 후 이상이 없다면 재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남도, 오리농가 방역 시설 설치 지원

또, 최근 전남지역 오리 농가들은 방역 시설 설치 지원을 받게 됐다.

최신식 자동화 소독 설비 지원을 통해 소독 효과 극대화를 꾀하고, A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차단에 도움이 되기 위해 광주전남도지회 전영욱 지회장이 발로 뒀던 결과다.

전 지회장은 “지난 4월 전남도 오리농가 456호를 대상으로 방역시설의 현황과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12개 시군 101호의 농가에서 소독기와 축사소독시설에 대한 지원 수요 의지를 밝혔다”며 “전남도 동물방역과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올해 가금농가 방역시설 지원을 받게됐다”고 말했다.

‘전남도 가금농가 방역시설 지원사업’의 사업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며,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로 총 사업비 45억원이 전남도 오리 농가 최신식 자동화 소독 설비에 지원된다.

우선지원 대상은 산란계·육계에 비해 비닐하우스 형태의 사육시설이 대부분인 오리농가의 사육·방역시설 우선 개편 필요에 따라 과거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170호와 그 인근 농가, 정부 정책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농가를 우선 지원하며, 최대 300호의 농가가 지원될 예정이다.

전영옥 지회장은 전국 최대 오리 주산지인 전남의 광주전남도지회를 이끌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동분서주하고 있다. 다음은 전영옥 지회장과 인터뷰 일문일답 내용이다.

Q. 오리협회 사육분과위원장, 오리자조금대의원회 의장, 광주전남도지회장을 맡으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A. 사육분과를 대표하면서 전국 최대 오리사육 지역인 광주전남도지회를 맡고 있으면서 가장 많이 들은 것이 농가들의 불만이다.

HPAI가 발생한 이후 조기 종식을 위해 방역 당국의 대책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지만, 현장과 전혀 동떨어진 대책이 나올 때마다 농가들의 불만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방역 당국에서는 명확한 발병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농가들의 잘못으로 몰아붙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중 삼중 제재를 가해 오리 농가들이 오리사육을 포기하게 하고 있다. 그 때문에 농가들은 방역대책이 나올 때마다 적극적으로 협조한 농가들에 돌아오는 것은 쌓이는 부채와 한숨뿐이라며 집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일방통행하고 있는 방역 당국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방역대책은 그만큼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방역 당국에는 최대한 농가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동시에 농가들에게는 방역대책의 효과와 방역 당국의 입장을 이해 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억누르기만 할 수는 없으므로 방역 당국에서도 현장의 목소리에 최대한 귀 기울여 방역대책을 세워줄 것을 바라는 바이다.



광주전남도지회는 드론을 활용해 폭염 대비 차열제를 도포했다.



1. 지난 6월 15일 광주전남도지회는 22일 한국오리협회 간담회 전 이사회를 열고 의견을 모았다.
 2. 전영옥 지회장은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Q. 현장의 목소리가 왜 중요한가?

A. 가장 최근의 일로 예방적 살처분 농가의 재입식 조건으로 분변을 외부 반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예방적 살처분 농가의 경우 HPAI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사후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 농가의 경우 HPAI 바이러스에 오염되지 않았다는 증거다.

방역 당국의 방역 조치에 최대한 협조해 살처분 조치에 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입식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억울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역 당국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우리는 공문은 물론 지자체, 오리협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없이 건의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결국 예방적 살처분 농가의 경우 정밀조사 후 발효 분뇨를 재사용하는 것이 받아들여졌다. 또한, 이를 통해 소통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입증된 것이다.

예방적 살처분 농가의 분변이 위험하다면 살처분하면서 같이 처리했어야 했다. 그런데 살처분 후 재입식할 때 처리하라고 하면 농가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과학적이면서 합리적인 대안으로 정밀 검사 후 이상이 없다면 재사용하는 것이 농가들의 입장이었다. 늦게나마 이러한 농가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다행스럽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농가 입장에서는 적게는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Q. HPAI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요?

A. 방역대책에 불만을 품고 방역 당국에 '무조건 제대로 된 정책을 내나라'라는 식의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것은 억지일 뿐이며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다.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어떠한 좋은 대책도 나올 수 없다는 것이 평소 생각이다.

현실적인 문제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역부족이라는 느낌이다. 방역 당국에서도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소통의 장이 마련 돼야 한다고 본다.

지금은 이러한 소통 창구가 없다는 점이 문제다. 이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한다.

HPAI 발생으로 인한 피해는 농가도 방역 당국의 잘못도 아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이를 차단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그 때문에 농가와 방역 당국은 적이 아니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야 할 연합군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HPAI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만큼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로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위기는 곧 기회’ 함께 노력해 극복해야

Q. 앞으로의 계획과 하고 싶은 이야기는?

A.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정책 입안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정책당국도 현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농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건의할 것이다.

특히 농가는 교육과 교화 대상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파트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몇 년간 HPAI는 물론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감소 등으로 인해 오리 산업이 위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오리 산업은 희망이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오리업계 종사자들은 오리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무장해야 한다.

위기(危機)는 위태로울 위(危)와 기회(機)라는 의미가 합쳐진 단어다. 위기라는 단어가 가진 부정과 긍정이 공존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정부와 농가, 계열업체 등이 함께 노력해 나간다면 시 극복은 물론 오리 산업이 다시 한번 날아올 수 있을 것이다.

